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노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7
----------	------

발의연월일 : 2021. 2. 18.

발의자 : 노세영, 김지근, 신성봉,
문희성, 강혜경, 박경흠,
김기환, 박채연, 이명녀,
권태호(10명)

1. 제정이유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5조~제6조)
- 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실비지급(안 제7조~제8조)

3. 근거법규 : 따로 붙임

- 가. 「지방자치법」 제9조
- 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 제4조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가. 조례안 예고 : 2021. 3. 29. ~ 2021. 4. 5.
- 나.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증”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이는 습관이나 절약 또는 취미로 수집하는 것과는 다른 치료가 필요한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심리치료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 지원대상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수거 지원
 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구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